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보수 2野

한국당·바른미래당 靑 인사 단행 시비 본회의 보이콧 영유아보육법 등 90여개 법안 처리 지연...예산심사 차질

국회는 15일 오후 2시 열기로 한 본회의를 개의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 때문이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에 이어 본회의 보이콧 방침까지 실행에 옮기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는 분위기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개혁법안 논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인사를 '야당무시 일방독주'로 보고 더불어 민주당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거부를 강력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보이콧을 봉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어 날 선 대치가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본회의 개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나 재적의원(299명)의 과반(150명)이 출석해야 안전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129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전원 참석에 무소속(7명) 의원 일부가 가세하면 절반을 넘길 수 있으나 이날은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대체로 참석했으나 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의원들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90건의 비정점 민생법안 처리도 미뤄졌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

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은 식품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돼 예정됐던 법안이었다.

이처럼 본회의가 불발되자 여야는 책임을 전가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후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두 야당이) 역지를 부려서 파행을 시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정부-여당은 물론 한국당-바른미래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 정무 과정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지 못해서(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이 정부 들어서 벌써 8명째 강행하는 부분은 문제"라며 "두 보수야당이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명분 없는 보이콧에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난감하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국장과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민노총 시위 중 기물 파손시 책임 물을 것” 김부겸 장관 행안위 회의 출석...“법 위에 군림 안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시위에 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기물을 파손한다면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노총이 공권력 대표 기관을 점거하면서까지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그런 행위가 신고되지 않는 행위라면 채증 등의 방법으로 의법 조치할 수 있는 여러 준비를 하겠

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라서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원님 말씀처럼 특정 집단이 삼권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조직된 노동자 단위로써 자제해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이어 청와대와 국회에서 항의 농성과 연좌 시위를 진행했다. 이는 이날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기자 tuim@

박지원 대표 발의 검경수사권 조정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채택 추진

민주평화당은 1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법특위) 위원인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쪽으로 기각을 잡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된 지 5개월이 되도록 정부 법률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조정안에서 대폭 후퇴한 법안을 지난 12일 백혜련 의원의 대표 발의했다. 정부 여당의 수사권 조정 후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특위 등 국회 차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조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면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중요한 사항을 보완해 (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 1차 토론을 했고 조만간 박지원 의원이 참석할 상태에서 당론 채택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사의 직접수사는 제한적으로 인정,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검사의 영상물청구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이의신청권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원 정수 확대를”

70여개 시민사회단체 모임 '정치개혁공동행동' 촉구

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의 선거제도는 수없이 많은 사표를 양산하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다”며 “현재 발의된 주요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의 핵심적 교집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모인다. 해답은 정해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은 평균 인구 9만 명당 국회의원 1명이 있는데 한국은 인구 17만 명당 1명”이라며 “특권은 없애고 의석은 늘리는 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또는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한편,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부가 관건이다.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고 비례대표 의원만 늘리려면,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야 하는데,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현재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세비를 동결하고 의원 정수만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 후 “당론으로 계속 가져온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연동형 비례제도는 더 논의해야 한다”며 “하나로 확정지으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선거구제 개편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방안을 만들면 다시 의총을 열어 토론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문대통령 국정 지지율 53.8%

야당·언론 경제실패 공세에 지난주보다 1.6%p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7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50% 초중반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6%포인트 내린 53.8%로 집계됐다.

지난 주 약보합 양상을 보이던 시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정평가는 1.1%포인트 오른 39.4%, 모름·무응답은 0.5%포인트 증가한 6.8%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경제지표 악화 소식과 일부 정당·언론의 경제실패 공세가 거의

일상화되면서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지속해서 확대됐다”며 “특히 이번 주에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관련한 뉴욕타임스 발 가짜뉴스와 북한에 대한 ‘감귤 답례’가 정쟁거리로 비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0.6%포인트 내린 40.1%를 기록, 역시 7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2.1%포인트 오른 22.8%로 3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정의당은 전주와 같은 8.4%로 횡보했고, 바른미래당은 1.6%포인트 내린 5.7%로, 7주 만에 5%대로 하락했다. 민주평화당은 0.3%포인트 내린 2.3%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무안 일로읍, 토지 6000평, 10억 급매



- ✓ 전남 무안군 월암리 62-12, 15, 16번지
- ✓ 임야 6000평, 도시지역 8~10M 도로접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
- ✓ 토목공사 완료, 전원주택지/타운하우스 최적
- ✓ 남악신도시 5분, 목포 10분, 광주 40분거리
- ✓ 몽탄~일로간 고속도로근접
- ✓ 시세 - 42억(평당 70만원)
- 문의. 010-6834-7400